

오늘 광주·전남 경선...민주 전대 호남대전에 정치권 촉각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 초반 열세 딛고 승리 발판 마련 주목 '어대명' 분위기 속 '최고위원 친명 구도' 깨질지도 관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광주·전남·북 경선을 앞두고 당권 주자들의 막판 총력전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38만명에 달하는 호남 권리당원의 선택이 향후 수도권 경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번 호남 지역경선에서 사실상 새로운 지도부의 면면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출신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인 광주의 송갑석(서구을) 국회의원이 초반 열세를 뒤집고, 호남에서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어대명' (여차피 대표는 이재명) 경선 분위기 속에서 친명계는 '당 대표 이재명'에 이어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 주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이들의 호남 성적표와 함께 '최고위원 친명 구도'가 호남에서 깨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전북에 이어 18일부터는 광주·전남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경선을 실시하고 21일 호남권 투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의 승리가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최종 성적표가 될 수 있기에 현재 당 대표 경선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막

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후보 측 한 인사는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당 대표 경선의 대세가 결정될 것이다"면서도 "반대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낮을 경우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한 당 대표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 있어 전체 경선 승리 못지 않게 이 후보의 호남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역 정치인들은 독주 분위기에 따른 반발 여론을 잠재우고, 지지표 결집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 장수 출신의 박용진 후보는 호남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전한다면 충분히 역전의 바람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후보로서는 최근 강훈식 후보의 사퇴로 이재명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가 만들어져 호남 경선 결과에 따라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또 이번 호남경선에서 최고위원 경선 구도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선 타지역 경선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송갑석 후보와 전북이 고향인 윤영찬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전체 판세도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자들이 호남에서 선전한다면 최고위원 경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대명' 구도가 깨질



17일 오후 KBS 광주방송 총국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광주·전남지역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능성도 있다.

현재 당 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면서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친명계 주자 4명이 당선권인 5위 이내에 포진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순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최근 이 후보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일부 정치인들은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호남 경선에서 '친명 대 반

명' 구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호남의 투표율이 높고, 호남 출신 주자들에게 표가 쏠리면 최고위원 경선 순위표도 요동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 유지 결정

구제조항 수정해 절충

당내 비명계 반발 고려한듯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당내 계파 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기소 시 당직정지' 당헌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당헌 제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해당 규정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당내에서는 이 규정이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 주변을 향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하는 시점에 당헌 개정 논의에 나서는 것은 '방탄용 위인살법'으로 비칠 수 있다는 반론도 당내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이 규정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

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같은 날 의총에서 비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토론이 이어졌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반박에 나서는 등 파열음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비대위에서 차단을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 당헌을 유지하되, 구제 방법을 규정 한 당헌 제80조 3항은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비대위는 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윤리심판원보다는 신속하고 정무적인 판단이 가능한 당무위의 의결을 통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찬반론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요구가 거세게 일면서 촉발된 논란을 비대위의 절충안이 가라앉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민주 전대 민생·개혁·미래 없고 계파·줄세우기 뿐"

광주·전남 청년 정치인들, 민주당 개혁 촉구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17일 민주당의 정치 개혁을 촉구하고, 다당제 정치개혁안 등 3가지 시안을 공개 질의했다.

최용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강수훈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 24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정치적 심장인 광주가 마비 직전이다"면서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9일 대선에서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민주당의 심장, 광주가 6월1일 지방선거에서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며 "이대로 가면 심장은 멈춰 버리고, 더 이상 정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 민생과 개혁, 미래는 없고 오로지 계파와 줄세우기로 편을 가르고 있다"며 "이렇게 가는 길은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다시 '지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과 국가균형발전 구체적 방안, 그린 뉴딜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변화와 고민 등 3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민심이 떠난 것에 대한 반성과 문제 해결은 하지 않고 정치 권력만을 연명하는 정치, 2년 뒤 총선과 5년 뒤 대선 공천에만 관심을 갖는 전당 대회가 대선 안된다"며 "암울한 미래를 바꾸기 위해 청년정치인들이 먼저 정치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野, '대통령실 관저·사적채용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수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국회에 17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기본소득 당 옹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 등 총 175명이 서명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이전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지만, 대통령실은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겠다는 의지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 재난 공백 이전 비용, 비용 고의 축소 논란, 집무실 관저 업체 선정 과정의 적절성 여부 등의 내용이 요구서에 담겼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국회 교섭단체 간 의석 비율 등을 고려해 특위가 편성된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 4억가)</p> <p>2) 월수익 350만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월수익 750만 연수익 9천만 매매14억5천(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향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사적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p>
		<p>광주</p> <p>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p> <p>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p> <p>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p> <p>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p> <p>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p> <p>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p> <p>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4억5천 (5/26)</p> <p>전남</p> <p>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p> <p>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p> <p>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p> <p>시외</p> <p>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 최저가 14억 (7/22)</p> <p>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 최저가2억8천(7/19)</p>

010-6670-9800 (062-382-5500)